

산재취약계층 실태분석

연구책임자/이경용

공동연구원/박정선, 문용호, 이관형, 최성원, 이나루, 김민수, 오지영

최근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적 정의나 규모 및 산재발생 규모 등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를 통해 파악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고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분류와 산재취약계층의 규모 및 산재관련 현황을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 분석을 하여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사고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재다발 업종은 이미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었다.

제조업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높았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재해율이 현격히 높았다. 운수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해율의 변화는 일관성이 없었다.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재해율을 비교하였을 때 세 업종 모두 상

용근로자에 비하여 임시근로자의 재해율이 높았다. 제조업 중분류에서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재해율이 높았으며, 제1차 금속산업에서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의 재해율이 현격히 높았다. 건설업에서 사고부상 재해의 80%이상이 임시고용근로자에게서 발생하였다.

사망 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재다발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었다.

제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률이 높았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사망률이 높았다. 사고부상재해율과 마찬가지로 운수업의 사망률은 규모와 관련이 없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세 업종 모두 상용근로자의 사망률보다 임시근로자의 사망률이 높았다. 건설업에서 사망재해의 80% 이상이 역시 임시고용근로자에게서 발생하였다. 산재다발집단

을 대상으로 한 산재예방사업에서 있어서 단
 순히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전략보다 더 세심한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근
 로자의 비중이 높아짐으로(5인 미만 사업장
 은 약 20% 임) 고용형태에 대한 고려가 산재
 예방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산재의 80% 이상이 임시고용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므로 건설업에서의 산
 재예방사업은 임시고용근로자의 고용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운수업에서
 는 재해율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발생하
 고 있으므로 근로자수가 많은 규모가 큰 사
 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산재예방사업을 전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용역근로, 파견
 근로, 호출근로와 같이 경우에는 종사 산업
 이나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 단위
 의 산재예방 사업 접근이 가능하지만 정규
 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 산재예방사업 추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산재
 예방 사업으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행 제도와 같은
 사업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업의 보완책으
 로서 비정규직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
 기 위하여 기존 자료가 지닌 한계와 정보의
 부족을 고려할 때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체계
 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산
 재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
 책적 개입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
 태 분석과 산재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초 자료와 정보의 생
 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